

## 주요국의 REDD+ 전략 연구2) National Strategies for REDD+ : Norway, Germany, Australia, United States and Japan

박미선<sup>1\*</sup>, 최세경<sup>2</sup>, 윤여창<sup>3</sup>

(<sup>1</sup>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sup>2</sup>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sup>3</sup>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지구기후변화 체제 하에서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REDD+3) 국가전략을 기술하고 비교하여 그 결과로부터 우리나라가 개도국에서의 REDD+ 사업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데 목적이 있다. REDD+ 시범사업 및 준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인 노르웨이, 독일, 호주, 미국, 일본을 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주로 REDD+ 사업 관련 국가 및 국제공식문서를 수집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각국이 공개한 REDD+ 재정 및 활동에 관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Mintzberg(1987)이 제시한 전략의 다섯 가지 정의(계획, 패턴, 술책 및 지위, 관점)를 활용하여 네 개의 분석 항목(예산 및 조직, 지원유형, 접근 및 활용방식, 목표 및 관점)을 구성하고, 분석항목을 중심으로 노르웨이, 독일, 호주, 일본, 미국의 REDD+ 전략을 기술하였다.

노르웨이는 국제기후변화체제에서 REDD+ 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대규모 재정지원은 국제적 수준에서 REDD+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프로그램의 출현에 크게 기여하였다. 독일은 전 대륙의 개도국과 맺어온 오랜 산림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양자협력체계 위주로 개도국의 REDD+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U시장에서 산림탄소배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림탄소배출권 확보가 아닌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과 생물다양성 확보를 전략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호주는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선호하고 있지만, 인접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와 산림탄소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두 국가만을 대상으로 REDD+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REDD+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은 양자협력 중심으로 여러 개도국의 REDD+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개도국의 REDD+ 전략과 저탄소개발전략을 연계시켜 접근하고 있다. 아직 기후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2009년에 제시된 '청정에너지안보법(안)'에서는 개도국에서의 REDD+사업을 통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국제상쇄크레딧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1995년부터 꾸준히 개도국의 산림복원 및 녹화사업을 지원해왔다.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직접지원금의 형태로 개도국을 지원한 반면 일본은 지원금의 81%이상을 융자형태로 지원하였다. 일본은 REDD+ 지원은 방법론 및 기술에 대한 개도국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REDD+ 탄소배출권을 국내 상쇄 제도에 포함시켜 국가온실가스감축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선진국 전략의 특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REDD+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1) 예산 및 조직: 지원목표액 설정과 관련 업무 전담조직 구성, 2) 지원 유형: 다자 또는 양자협력, 우리나라와 우호적 산림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게 선지원, 3) 접근 및 활용방식: 산림탄소배출권 활용, 4) 목표 및 관점: 산림녹화경험 활용 및 저탄소녹색성장 전략.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작은 규모의 예산을 REDD+ 사업에 지원하고 있지

2) 본 연구는 산림청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S210910L010100)'의 지원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3) REDD+는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이외에 산림 보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탄소량 증대활동을 포함한다.

만,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작은 예산이지만 수여국을 적절히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나라와 오랫동안 산림협력관계를 맺어온 국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산림녹화기술 및 정책을 공유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저탄소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함께 지구적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개도국 입장에서 시도하는 REDD+ 사업 지원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